
주요국 예산안 - 독일

2019. 12.

연구책임자

김현아 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동욱 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4
2. 예산기조	6
3. 예산안	10
가. 재정수입	10
나. 재정지출	12
4. 주요 정책	17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17
나. 조세정책.....	20
다. 재정건전화	21
라. 기후변화	23

독일

FY2020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출처

○ Haushaltsgesetz 2020, 2019.7

○ Finanzplan des Bundes 2019 bis 2023, 2019. 7

○ Finanzbericht 2020, 2019.8

○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0, 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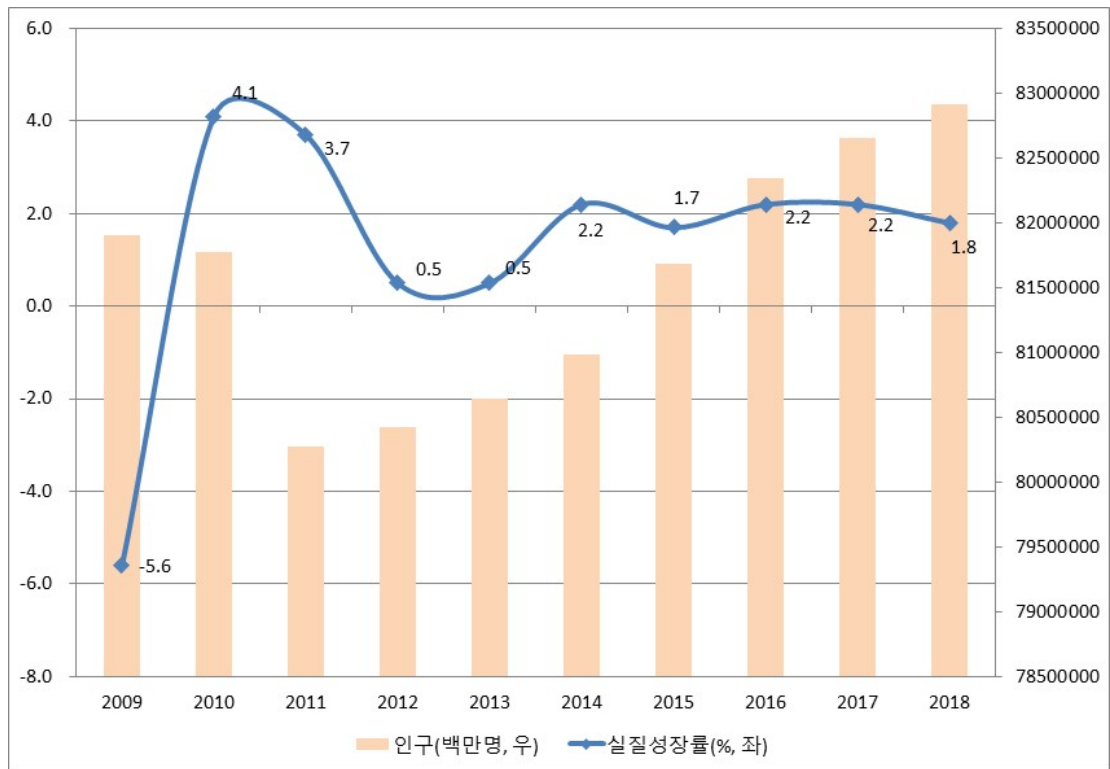
환율: 1유로 = 약 1,306.27원(2019년도 1월~10월 평균, 매매기준율)

경제규모 : 2018년 경상GDP 3조 9,967억달러(World Bank)

교역규모: 2018년 2조 8,795억달러(IMF)

인구 : 8,291만명(2018년 기준, OECD)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자료: OECD, 발표 수치를 기초로 차트 작성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경제에너지부의 2019년 봄전망보고서(Frühjahrsprojektion)에 따르면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로 독일의 GDP 성장률은 2019년 0.5%, 2020년 1.5%로 하향조정
- (재정전망)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adjusted primary balance)의 변화로 독일의 2020년 재정정책은 확연한 확장(distinctly expansionary) 기조지만,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은 유지될 전망

□ (예산기조) 사회통합, 현대화, 환경·기후변화 분야에 우선순위 설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액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세입) '20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19년 대비 1% 증가한 3,599억유로로 편성
- (지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2019년 3,564억유로에서 2023년 3,757억유로까지 상승 할 전망이며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편성

□ 주요재정정책

- (디지털인프라) 24억유로 규모의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학교디지털화협약(DigitalPakt Schule)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교육인프라에 지원할 계획
- (혁신전략) 혁신 및 성장촉진 연구(Hightech-Strategie 2025) 프로그램에서 R&D 아이디어 육성 목적으로 도약 및 혁신지원을 위한 기관(Agentur zur Förderung von Sprunginnovationen)을 설립
- (기후변화) 독일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목표로 기후보호2030 프로그램(Klimaschutzprogramm 2030) 발표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19.1.15.	FY2018 잠정결산 발표
2019.1.31.	2019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19.2.22.	2018년 통합재정수지 발표
2019.3.20.	FY2020 예산안 및 FY2019-2023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2019.4.17.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채택
2019.5.9.	제155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19.6.26.	FY2020 예산안 및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2019.9.19.	기후보호2030 대책 발표
2019.10.17.	가을경제전망 발표
2019.10.30.	제156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19.11	예산위원회 FY2020 예산안 수정회의 및 본회의
2019.11.29.	FY2020 예산안 연방하원 통과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경제에너지부의 2019년 봄전망보고서(Frühjahrsprojektion)*에 따르면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로 독일의 GDP 성장률은 2019년 0.5%, 2020년 1.5%로 하향조정¹⁾²⁾

* 봄전망은 통계청, 연방은행과 함께 에너지경제부 내 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거시경제 주요수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공

- 2018년에 변경된 국제표준 배기가스 시험(WLTP³⁾)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생산 둔화 또한 주요 경기 저해요인으로 지적
 - 견고한 노동시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인프라, 교육·연구분야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부터 완만한 성장이 전망됨
 - 또한, 공공건설투자는 저금리와 높은 수요로 인해 호조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증가할 전망
- (고용인구) '19년까지 4,5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실업률 또한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전망

1) 경제에너지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9.04.17.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9/20190417-altmaier-schwaechephase-wird-wieder-ueberwunden.html>

2) 2018년 11월 경제에너지부의 가을전망 GDP 성장률은 2019년 1.8%로 전망한 바 있음

3) 국제표준 배기가스시험: 기존 실험실에서만 수행된 자동차 배기가스시험을 실도로조건(real driving conditions) 배출허용기준까지 확대. 2018년 9월 1일 이후부터 생산된 차량에 적용(EC, 2018)

<표 1>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1.4	0.5	1.5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1.0	1.2	1.6
정부최종소비 증기율	1.0	2.0	1.8
총투자 증가율	2.6	2.2	2.8
설비투자	4.2	2.0	3.0
건설투자	2.4	2.7	3.0
수출 증가율	2.0	2.0	3.0
수입 증가율	3.3	3.8	4.0
고용인구(백만명)	44.8	45.3	45.7
실업인구(백만명)	2.34	2.20	2.11

자료: 경제에너지부, Frühjahrsprojektion 2019

<표 2> 기술적 가정

(단위 : 억유로, %)

	2018	2019	2020
단기 이자율(연평균)	0.00	0.00	0.00
달러/유로 환율	1.18	1.14	1.14
내수시장성장	3.6	2.5	3
유가(US달러)	70.9	65	65

주: 4월 봄전망보고서에 인용한 주요 기술적 가정

자료: 연방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0 2019.10, p.7

<참고 1> 2019년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 (경제성장) 금년 독일경제는 세계무역의 둔화에 따른 수출하락 및 산업침체가 지속되지만, 양호한 국내수요, 추가 재정부양책 및 내년도 수출회복 전망 등의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19년 0.5%, '20년 1.0%로 전망
 - (수출) 브렉시트 및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압박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대외무역이 급격히 확대 될 것으로 전망(수출증가율 '19년 1.0%, '20년 2.0%)
 - (내수경제) 건설부문 호황에 따라 고용확대 및 임금증가가 전망되며, 2020년 근로자수는 약 4,540만명으로 전망
- 한편, 알트마이어(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독일 경제발전에는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지만, 현시점에 전망이 밝지 않아도 경제위기 우려는 없다”고 언급
 - 또한, 중소기업 및 산업분야에 세금감면, 규제완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장기반 솔루션, 미래지향적 기술에 대한 투자 및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성장촉진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산업지원이 필요

<표-3>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1.5	0.5	1.0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1.3	1.4	1.2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1.3	2.2	2.1
총고정자본형성	3.5	2.5	1.9
설비투자	4.4	0.6	1.0
건설투자	2.5	3.8	2.2
내수	2.1	1.2	1.5
수출 증가율	2.1	1.0	2.0
수입 증가율	3.6	2.6	3.3
고용인구(백만명)	44.9	45.2	45.4
실업인구(백만명)	2.34	2.27	2.31

자료: 경제에너지부, Herbstprojektion 2019

나. 재정전망

- 2019년 10월 예산안자료에 따르면,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adjusted primary balance)의 변화로 독일의 2020년 재정정책은 확연한 확장(distinctly expansionary) 기조지만,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은 유지될 전망
 - (재정지출) '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599억유로이며, '23년에는 3,757억유로로 지출증가가 예상되며 균형예산을 유지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20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⁴⁾는 GDP 대비 0.5%로 전망하며, GDP 대비 0.5% 이하의 중기재정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중기재정전략) 2012년부터 독일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적 적자는 상한선 0.5% 목표를 준수했으며 금년 중기재정전략 또한 2023년까지 목표를 이행할 전망
 - (국가채무)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약 59.75% 달성될 전망
 - '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년 57.75%, '21년 56.25% 수준을 달성할 전망

<표 4> FY2020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2019	2020	중기재정계획		
			2021	2022	2023
재정지출	3,564	3,599	3,662	3,724	3,757
전년 대비 증감률(%)	2.4	1.0	1.8	1.7	0.9
재정수입	3,564	3,599	3,662	3,724	3,757
조세수입	3,225	3,270	3,342	3,455	3,561
신규차입	-	-	-	-	-
투자	389	398	398	398	398
군수조달	156	166	155	153	151

자료: 연방재무부, Bundshaushalt 2020 und Finanzplan bis 2023(2019. 07)

4) 구조적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혹은 세출 변화를 통제하는 것으로 경기 순환적 요인을 배제하고 재정기조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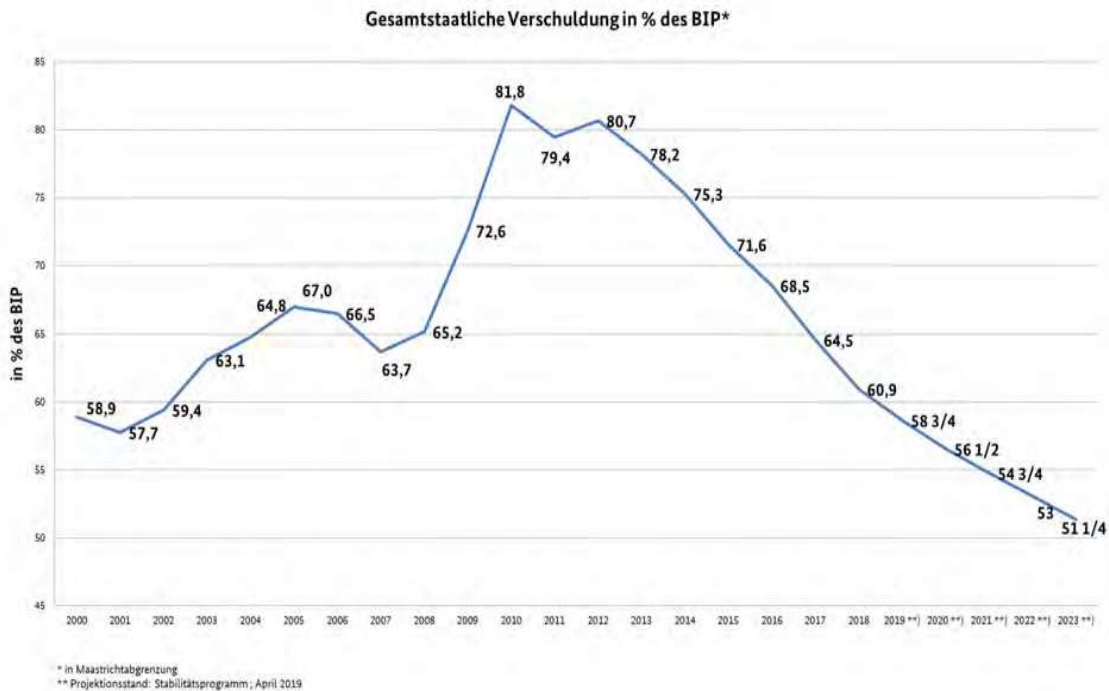
<표 5>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채무	59.75	57.75	56.25	54.75	52.75
총채무 비율변화	-2.25	-2.00	-1.50	-1.50	-1.75
재정수지	1.25	0.75	-	-	-
구조적 재정수지	1.25	0.5	-	-	-
기초 재정수지 ⁵⁾	-2.25	-1.50	-1.00	-1.00	-1.25
이자지출	0.75	0.75	0.75	0.75	0.75
기타 조정	-0.75	-1.25	-1.25	-1.25	-1.25
내재이자율	1.25	1.25	-	-	-

주: 마스트리히트 기준, 2019~2023년은 전망치
 자료: 연방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0(2019.10), p.12

[그림 2] 독일 국가채무추이 및 전망



주: 마스트리히트 기준, 2019~2023년은 전망치, 4월 봄전망에서 예측한 국가채무 전망치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20 und Finanzplan bis 2023(2019. 07)

5) 기초재정수지: 이자지출과 이자수입 제외하고 계산한 재정수입·지출 차액으로 실질적인 재정활동 및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 예산기조

- (재정지출) 사회통합, 현대화, 환경·기후변화 분야에 우선순위 설정
 - (사회통합) 자녀양육비⁶⁾ 및 주거비지원, 통일세 폐지,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보조금(5.5억유로) 지원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강화에 집중
 - (교육·연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교육지원에 4년간 1,000억유로 규모를 지출할 계획이며, 연방교육지원법(BAföG)⁷⁾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
 - (현대화) 효율적 인프라, 미래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40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디지털) 연방정부의 학교 디지털 교육예산 50억유로,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30억유로,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지원할 계획
 -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및 기후 기금(Energie- und Klimafonds)⁸⁾을 통해 기후보호계획 2050(Klimaschutzplan 2050)⁹⁾을 이행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강화
 - (국방·개발협력) 국방예산은 '18년도 결산 대비 60억유로 증액된 450억유로로 집계되었으며, 국제경제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23년까지 ODA 펀드에 5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6) 2019년 7월 1일부터 매월 10유로씩 증액(연방내각에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가정의 가처분소득 강화를 위한 가족구제법(Familienentlastungsgesetzes) 채택)

7) 연방교육지원법(BAföG):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교육지원법은 청년들에게 생활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지원 대출법이며, 주거비, 중산층 지원, 부채감축을 위해 기존 지원금을 대폭 인상(예: 기존 매월 205유로를 지원했던 주거비를 325유로로 인상, 생활비 또한 기존 최대 735억유로에서 850유로로인상).(연방교육연구부, 2019)

8) 에너지 및 기후기금(Energie- und Klimafonds): 2011년 이후 에너지 및 기후기금을 통한 안전하고 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

9) 기후보호계획2050(Klimaschutzplan 2050):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기후보호계획은 에너지경제, 건물, 교통, 공업, 농업 분야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개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95%로 감축할 계획(BMU, 2018)

□ FY2020 예산안 연방의회 통과¹⁰⁾

- 하원은 2019년 11월 29일 정부안 대비 약 21억유로 증액된 3,620억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으로 통과시켰고, 국방, 유치원 증설, 대중교통 및 기후보호에 대한 투자를 발표함
 - 역대 독일 예산 최대 규모인 451억유로(GDP 대비 2%)의 국방예산을 편성했으며, 연방군의 해외 임무와 NATO 협약 이행을 위해 지출될 계획
 - 기후패키지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철도티켓 판매세율인하, 항공세 인상, 건물의 석유난방 시스템 교체 지원 등을 이행할 계획
 - 2020년 예산에서 인프라 및 사회 투자지출은 전년대비 약 10% 증액된 약 429억유로를 편성하였으며, 도로확장 및 유지보수, 유치원 건립, 학교디지털화 및 농촌지역 네트워크 지원이 포함됨

10) 연방 재무부, Themen, Öffentliche Finanzen, Bundeshaushalt, 2019.11.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Video/2019/2019-11-26-scholz-bundestag-bundeshaushalt-2020-erste-rede/2019-11-26-scholz-bundestag-bundeshaushalt-erste-rede-2020.html>
Deutsche Welle, German parliament passes record budget, 2019.11.29
<https://www.dw.com/en/german-parliament-passes-record-budget/a-51463550>

<참고 2> FY2020년 예산 편성과정

- 2020년 예산은 아래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
 - 2018년 12월 17일 2019년 회계연도의 연방예산법 채택
 - 2019년 4월 17일 세수추계를 위한 공통된 거시지표 산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봄전망 발표
 - 2019년 5월 9일 세수추계 결과발표
 - 2019년 6월 12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에서 5G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경매결과 발표
 - 2019년 6월 26일 연방정부가 채택한 2020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초안 발표
 - 2019년 7월 31일 전기차 및 추가 세법개정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법 초안 발표
 - 2019년 8월 21일 통일연대세 폐지관련 초안 발의
 - 2019년 9월 의회심사
 - 2019년 9월 25일 기후보호2030 프로그램 채택
 - 2019년 10월 경제에너지부 가을경제전망 발표
 - 2019년 11월 세수추계결과 발표
 - 2019년 12월 2020년 회계연도의 연방예산법 채택

<참고 3> FY2018 잠정결산

-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동일 수준을 나타내면서 신규차입 0 기록
 - (재정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3,436억유로로 기존 지출목표대비 47억유로 증가
 - (재정수입) 조세수입이 EU자체수입이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목표치 대비 11억유로 상회하는 등 2018년 재정수입은 목표치보다 47억유로 많은 3,483억유로로 집계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5% 흑자를 기록, 이는 채무 제한법¹¹⁾ 기준 대비 0.5%p 높은 수치

<표 V-6>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18(목표)	2018(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436	3,483	+47
재정수입	3,436	3,483	+47
조세수입	3,213	3,224	+11
세외수입	207	259	+53
목적예비비	16	-	-16
신규차입	-	-	-

자료: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9.01.15.

11)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161)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20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19년 대비 1% 증가한 3,599억유로로 편성

- (조세수입) 급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크게 증가하여 '20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277억유로 규모임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년 대비 4억유로 감액된 322억유로 규모임

<표 7> 항목별 연방조세수입

(단위 : 억유로, %)

세수항목	2019 (A)	2020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Steuereinnahmen)	3,238	3,277	1.20
급여세(Lohnsteuer)	932	976	4.72
소득세(veranlagter Einkommensteuer)	256	259	1.17
원천징수 소득세(den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21	113	-6.61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21	20	-4.76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164	169	3.05
부가가치세 공동귀속분(Steuern vom Umsatz)	1,196	1,255	4.93
연방과 주에 이전금액(Gewerbesteuerumlage)	20	20	0.00
연방세(Bundessteuern) ¹⁾	1,086	1,096	0.92
EU기금(EU-Finanzierung)	-292	-329	12.67
지방분권기금(Regionalisierungsmittel)	-87	-88	1.15
보충교부금(Ergänzungszuweisungen)	-77	-103	33.77
자동차세 손실보전금(Kompensation Kfz-Steuer)	-90	-90	0.00
재정안정보조금(Konsolidierungshilfen)	-8	-11	37.50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5	-10	100.00
세외수입	326	322	-1.23
재정수입	3,564	3,599	0.98

주: 1) 연방세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으로 보험세, 담배세, 커피세, 증류주세, 와인세, 샴페인세, 주세, 전기세, 에너지세, 자동차세, 항공세, 연대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소비세임(송원근, 2018)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0, 2019.8, p.64

<참고 4> 연방재무부, 제 155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및 추계방식¹²⁾

- (세입) '19년 총 세입은 7,937억유로로 전년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견고한 노동시장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23년까지 매년 3%대 증가율이 기대됨

<표 8>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방정부	3,224 (4.2)	3,243 (0.6)	3,288 (1.4)	3,400 (3.4)	3,515 (3.4)	3,603 (2.5)
주정부	3,141 (5.2)	3,218 (2.5)	3,333 (3.5)	3,450 (3.5)	3,579 (3.7)	3,707 (3.6)
기초자치단체	1,113 (5.9)	1,136 (2.1)	1,183 (4.1)	1,228 (3.8)	1,270 (3.5)	1,314 (3.5)
EU ²⁾	286 (31.9)	340 (18.9)	378 (11.1)	392 (3.8)	413 (5.4)	460 (11.2)
총 세입	7,763 (5.7)	7,937 (2.3)	8,180 (3.1)	8,470 (3.5)	8,778 (3.6)	9,084 (3.5)

주: 1)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20~'23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재무부, Presse Aktuelles 2019.5.9.

- (추계방식) 독일의 세수추계는 8개 기관들의 독립적인 추계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임

- (작업반) 연방재무부, 연방경제에너지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들, 기초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 5대 경제연구소는 독일경제연구소(DIW), 뮌헨대학교 경제연구소(ifo), 쾰른대학 세계경제연구소(ifw), 할레 경제연구소(IWH),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

- (세수추계) 작업반 구성 기관 중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연방재무부가 모두 독립적으로 각 세목에 대해 추정안을 제시

- 작업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추정방법이나 모형은 존재하지 않음

- (작업반 회의) 독립적 세수추계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에서 논의를 통해 각 세목별로 합의에 도달(회의 기간은 통상 3일)

12)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9. 5.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9/05/2019-05-09-pm-steuerschaetzung.html>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독일의 재정제도』, 2011.9

나. 재정지출

-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2019년 3,564억유로에서 2023년 3,757억유로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사회통합, 현대화, 환경·기후변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교육·연구) 연방교육부(BMBF) 예산은 전년대비 0.4% 감액된 182유로로 편성됨
 - 제 26회 연방교육지원법(BAföG) 개정에 따라 2020년 고급훈련교육에 1.25억유로 2021년 2.7억유로를 편성할 계획
 - 2023년까지 암치료에 대한 국가전략(Nationale Dekade gegen den Krebs)¹³⁾에 1.4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생물다양성 및 기후연구 및 지속가능한 도시이동수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Forsch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프로그램에 전년대비 1,400만유로 증액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연구혁신협약(Paktes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IV) 예산을 전년대비 3% 증액함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전일제 학교지원 및 돌봄에 2020년 2021년 각각 5억유로를 배정하였으며, 이는 초등학생을 위한 데이케어 및 교육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편성될 계획
 - (내무·국토건설) 연방내무부(BMI) 예산에 전년대비 3.3% 감액된 153억유로로 배정하여 국내치안 및 사회주택 건설 등을 지원
 - 금년 내무예산에 약 60억유로를 편성하여 연방경찰(Bundespolizei) 39억유로,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 8억유로를 각각 배정할 계획
 - 주거보조금개혁 2020(Wohngeldreform 2020)¹⁴⁾에 따라 금년 6억유로(전년 1.1억유로)로 증액될 전망이며, 사회주택 건설에 10억유로, 도시개발분야에 7.9억유로를 지출할 전망

13) 연방교육연구부는 2019년 1월 암정복을 위한 새로운 10년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암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실습을 위해 10년 동안 6,600만유로를 지원할 계획(BMBF, 2019)

14) 주거보조금개혁 2020: 2016년 이후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기인하여 2020년 1월부터 저소득층 가정 및 은퇴자 66만가구에 약 12억유로의 주택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의 주거급여법안(WoGStäkG)이 2019년 11월 연방상원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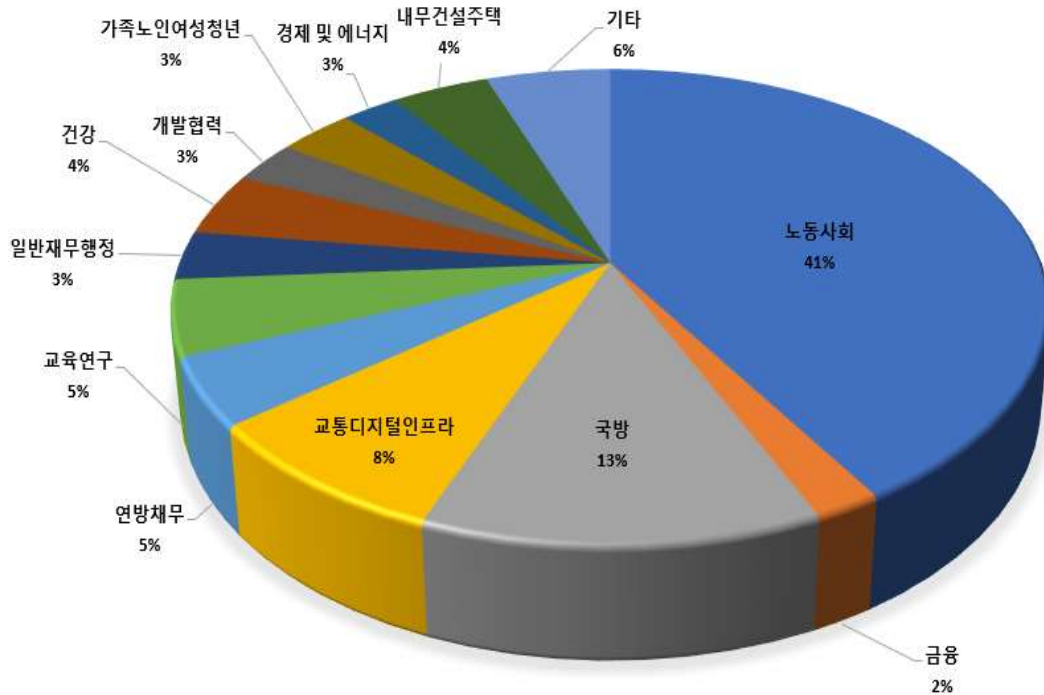
- 또한, 2018년에 도입된 주택자녀수당(Baukindergeld) 제도를 통해 2020년 8.6억유로, 2023년 9.7억유로까지 증액할 계획이며, 스마트도시건설 프로젝트 2020(Modellprojekte Smart Cities)을 위해 1.55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국방) 연방군의 개인보호장비 지원 및 무기 디지털화 확대와 나토의 고강도준비태세 합동임무여단(Very High Readiness Joint Task Force) 지원을 위해 금년 국방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3.9% 증액된 449억유로로 편성
- (경제협력) 경제협력개발부(BMZ), 외무청(AA), 환경부(BMU)가 참여하는 경제협력분야 강화를 위해 '23년까지 ODA 펀드에 5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인도주의적 구호(Humanitäre Hilfe), 위기방지 및 안정화 지출 등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6.8억유로를 지원하고 대외문화 및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연방외무청 예산도 크게 증액할 계획
 - 201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ODA 공공펀드에 약 250억달러(GNI 대비 0.51%) 규모를 지출했으며, 이는 미국(343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임
-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금년 환경부 예산은 전년대비 14.8% 증액된 26.2억유로로 편성
 -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Internationale Klimaschutzinitiative)¹⁵⁾ 약 4.6억유로가 배정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 에너지 및 기후기금 외 약 5,570만유로가 추가로 편성될 예정
 - 생물다양성 및 곤충보호를 위해 2020년 4,430만유로, 2021년 3,780만유로 등을 연방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2020으로 지출 할 계획
 -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및 이행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부지 선정을 위해 금년 1.1억유로를 편성할 계획
- (경제·에너지) 금년 경제에너지부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유로 증액된 91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인공지능, 디지털 아젠다에 중점을 둠

15)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동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펀드 재원은 배출권 거래의 경매수익 및 환경부(BMU)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기후보호 기금은 2019년 2,000만유로에서 2021년까지 5,000만유로까지 확대할 계획

- 또한 독일의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항공우주센터 자금 지원 목적의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등 항공우주분야 지출을 증액할 계획이며, 조선업의 혁신을 위해 높은 수준의 지출 계획
- (교통·디지털인프라) 철도분야의 친환경 및 현대화를 위한 교통예산을 전년대비 7.7억유로 증액하는 등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예산을 전년대비 2.0% 증액된 298억유로로 배정
 - 독일정부는 2029년까지 능률·금융협정(LuFVⅢ)¹⁶⁾의 인프라 자금을 통해 철도 현대화 및 노선확장에 약 514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이로 인해 철도건설 보조금을 이전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2022년 2.9억, 2023년 5.3억유로 증액할 계획
- (사회보장·고용) 금년 노동사회부(BMAS)는 전년대비 23% 증액된 1,486억유로로 집계됨
 - 연방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방정부 사회지출은 2019년 1,795억유로에서 2023년 1,981억유로로 증가할 전망임
 - 사회지출대비 총지출은 금년 50.4%에서 2023년 52.7%로 증가할 전망
 - 지난 5월 세수추계에서 연금기여율은 18.6%로 집계되었으며, 연방노동사회부의 예산에서 금년 의무연금(Rentenversicherung) 기여는 1,018억유로 규모임
 - 연방정부가 지원할 지방정부의 노인기초생계보장 및 장애수당 순지출(Nettoausgaben)은 77억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 중기재정대비 1억유로 줄어든 규모임
 - 금년 구직자지원(Leistungen zur Eingliederung in Arbeit) 관련 예산은 1억유로로 2019년 증가폭(4억유로)이 줄어들 계획이며, 장기실업자의 수급자격, 배치 및 재구직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기금 조성을 계획
 - 금년 실업급여(SGB II)을 통한 간접급여는 전년 중기재정대비 2억유로 감소한 26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직자에 대한 기본급여는 51억유로로 전년대비 5억유로 증가

16) 능률금융협정(Leistungs- und Finanzierungsvereinbarung - LuFV): 교통디지털인프라부와 철도인프라 회사는 철도의 유지보수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협정을 2009년에 체결함.(연방철도청, 2019)

[그림 3] 2020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0, 2019.8, p.19

<표 9> 2018-2023 주요분야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보장	171,248	178,737	183,159	190,046	195,052	199,629
국방	33,045	37,286	38,902	38,014	38,019	37,866
영양·농업·건강	1,220	1,610	1,735	1,677	1,658	1,642
경제·에너지	5,178	6,101	7,778	5,984	5,708	4,435
교통	27,233	27,412	27,300	28,907	29,506	29,407
건설 도시개발	2,784	3,559	2,485	2,726	2,718	2,554
연구·교육·문화	23,118	25,676	26,117	26,639	25,829	25,759
환경보호	1,516	2,643	2,917	2,407	2,394	2,166
스포츠	179	229	239	228	243	246
내무·이민	7,435	8,166	8,632	8,598	8,522	8,410
경제협력개발	9,245	10,163	10,265	9,304	9,303	9,212
일반재무	25,813	27,199	25,145	25,911	26,994	26,462
특별기금	5,289	1,892	1,300	2,258	2,234	2,734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0, 2019.8, pp. 21

<표-10>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9 (A)	2020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47.64	44.73	-2.91	-6.1
연방하원	990.91	1,021.75	30.84	3.1
연방상원	37.50	39.45	1.95	5.2
총리실	3,241.75	3,193.71	-48.04	-1.5
외무부	5,825.84	5,737.65	-88.19	-1.5
내무부	15,849.45	15,326.91	-522.54	-3.3
법무부	895.32	912.28	16.96	1.9
재무부	7,180.43	7,477.03	296.60	4.1
경제에너지부	8,187.75	9,138.39	950.64	11.6
식품농업부	6,323.82	6,518.10	194.28	3.1
노동사회부	145,260.25	148,562.55	3,302.30	2.3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29,285.67	29,871.07	585.40	2.0
국방부	43,227.81	44,916.39	1,688.58	3.9
보건부	15,305.29	15,325.10	19.81	0.1
환경부	2,287.10	2,624.68	337.58	14.8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0,448.32	11,804.27	1,355.95	13.0
헌법재판소	34.36	35.27	0.91	2.6
회계감사원	162.04	163.14	1.10	0.7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25.22	25.14	-0.08	-0.3
경제협력개발부	10,245.69	10,373.19	127.50	1.2
교육연구부	18,269.75	18,200.74	-69.01	-0.4
연방채무	18,380.13	16,548.52	-1,831.61	-10.0
일반조세행정	14,887.98	12,039.96	-2,848.02	-19.1
재정지출	356,400.00	359,900.00	3,500	0.98%

자료: 연방재무부, *Hausaltsgesetz* 2019, 2019.8

4. 주요 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1) 디지털 인프라

- (디지털인프라 특별펀드) 24억유로 규모의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학교 디지털화협약(DigitalPakt Schule)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교육인프라에 지원할 계획
 - (목적) 동 특별기금은 현대식 교육환경 구축과 농촌지역 등에 광대역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재원) 24억유로 규모로 조성된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은 5G라이선스 경매를 통해 약 65억유로 규모의 재원을 확보
 - 2019년 6월 12일 Bundesnetzagentur은 2GHz 및 3.6GHz 모바일 스펙트럼 경매 완료
 - (학교디지털화 협약) 연방정부는 교육인프라 및 장비를 위해 제공하는 광범위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구조적인 개선 달성 목표
 - 지방정부는 교육과정 및 교사훈련을 개선하고 전자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략적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초석 마련
 - 교육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인 학습 능력 향상 및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 및 최적화를 목표로 함

<표 11> 2020년 디지털특별펀드 계획

(단위: 백만유로)

	2018	2019	2020
총수입	2,400	2,400	1,605.3
연방보조금(Bundeszuschuss)	2,400	-	-
준비금 반출(Entnahme aus Rücklagen)		2,400	1,605.3
총지출		2,400	1,605.3
gigabit 네트워크 확장 지원		74.7	463.5
주정부 재정지원(Finanzhilfen an die Länder)	-	720	
준비금 공급(Zuführung an Rücklagen)		1,605.3	1,141.9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20 und Finanzplan bis 2023(2019. 07)

2) 교육·연구

- (혁신전략) 혁신 및 성장촉진 연구(Hightech-Strategie 2025) 프로그램에서 R&D 아이디어 육성 목적으로 도약 및 혁신지원을 위한 기관(Agentur zur Förderung von Sprunginnovationen)을 설립하여 10년 동안 약 1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동 기관은 연구개발단계에서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과학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신제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독일의 미래산업을 전환하는 목적으로 설립
 - 새로운 지식과 이해 관계자들을 최첨단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개방형 혁신문화 구축함
 - 첫 단계로 인공지능, 의학, 에너지 세 분야에 파일럿 혁신 지원을 제공할 계획
- (AI 전략) 인공지능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분야¹⁷⁾에 30억유로 투자
 - 동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양성과 AI 관련 중소기업 및 수출주도기업 지원에 집중

17) 독일의 인공지능 전략은 인공지능기술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이며, 2018년 7월 경제에너지부, 교육과학부, 노동사회부가 공동의결서 발표

- 국가적 차원에서 12개의 리서치센터를 설립하고, 대학과 연계를 통해 100명의 핵심 연구진을 추가로 양성
- 또한 2019년 5월 독일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기술이전, 대중소통, 영향평가, 기술 및 데이터 가용성을 위해 5억유로를 추가로 투입¹⁸⁾
 - 연구단계에서 기술이전 등 사업화 단계로의 빠른 전환 촉진
 - 특히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¹⁹⁾ 센터에 인공지능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
 - 또한, 칼리첵(Karliczek) 교육연구부 장관은 자율주행 및 생명과학분야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
 - 하일(Heil) 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간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틀에 대한 폭넓은 대중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
- (경쟁법 4.0) 독일의 경쟁법4.0 위원회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감독체계 현대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9월 9일 관련 목표를 제시함
 - 경쟁법 4.0은 EU 경제수준에서 경쟁법 및 부문별 규제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 소비자가 자신의 고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개선
 - 지배적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행동규칙 도입필요
 - 디지털 부문에서의 협력에 대한 법적 확실성(certainty) 강화
 - 경쟁법과 기타 디지털 규제 간의 제도적 연계 강화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액세스 및 디지털 생태계와 관련된 22가지 특정 권장 사항을 작성

18) 경제에너지부, GEMEINSAME PRESSEMITTEILUNG, 2019.05.23.

<https://www.bmwi.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2019/20190523-federal-government-gives-500-million-boost-to-funding-for-artificial-intelligence.html>

19)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 2015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4.0은 독일 내 지역별로 역량강화센터(Competence Center)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간 전문지식, 실제사례,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 경제에너지부가 담당하여 핵심사업 운영(BMWi, 2018)

-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교육기회, 학술적 연구 강화 및 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지향적 지원방식으로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²⁰⁾에 22억유로 규모를 편성할 계획
 - 2015~2020년까지 1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었던 고등교육협약을 2021년 1.5억유로, 2022년 6억유로로 지원을 연장할 계획
 - 연방교육지원법(BAföG)을 통해 직업교육과정 졸업 후 취업지원 제도²¹⁾ 등 직업예비교육 프로그램에 약 13억유로를 추가로 지원

나. 조세정책

- (R&D) 2019년 5월 22일 내각에서 제안한 R&D 세액공제(Forschungszulagengesetz)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세금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함
 - R&D 인력에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임금 및 급여와 사회보장기부금 등 R&D 인건비 공제에 중점을 둠
 - 독일 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비율 25%, 최대 적격비용(eligible costs) 2백만 유로로 설정
- (보육) 아동보호의 질과 참여법(KiQuTG)은 독일의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을 동등하게 제공하여 저소득층 가정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 19일에 통과
 - 동 법은 주정부가 이행할 품질개선조치에 대해 연방정부와 개별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정부의 55억유로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주정

20)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 2020):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수요에 맞춰 학습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2015~2020년간 1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연방재무부, 2018 & 박동, 2016)

21) 직업교육과정 졸업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Abschluss und Anschluss-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 연방정부와 지역 고용지원청과 연계한 연방차원의 교육·고용 연계 지원프로그램임

부에 배분할 계획

- (임대주택) 임대용 주택건설의 납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새로운 특별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인센티브 시행
 - 신규임대주택 생산자와 취득자에게 3년간 매년 5%의 일시적인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임

다. 재정건전화

- (안정성장협약) 연방내각은 EU회원국들의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안정화 프로그램 제출²²⁾
 - (경제전망) '18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1.4%이며, 금년에는 전년대비 0.4%p 하락한 1.0%를 달성할 전망
 - 국제무역분쟁 및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배출가스시험표준(으로 인한 자동차제조업의 납품지연 등이 독일의 성장속도 둔화에 기인
 - (재정전망) '18년 독일의 재정수지는 세수증가 및 낮은 이자비용으로 GDP 대비 1.7% 흑자를 달성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금년에는 0.75% 흑자규모가 축소됨
 - (국가채무) '19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15%p 감소한 GDP 대비 58.75%로 전망되며, '20년까지 계획된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 대비 60%이하를 '19년 조기에 달성할 전망
 - (재정정책)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정책으로 장기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유아보육(pre-school childcare) 등에 인건비 보조금(labour cost subsidies) 지원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지원 및 사회주택(social housing) 건설을 지원할 계획

22) 독일 재무부, Pressemitteilungen & Monatsbericht des BMF

<표 12>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1.4	1.0	1.6	1.1	1.1	1.1
재정수지	1.7	0.75	0.75	0.50	0.50	0.50
구조적 재정수지	1.4	0.75	0.50	0.50	0.25	0.25
국가채무	60.90	58.75	56.50	54.75	53.0	51.25

주: 동 수치는 2019년 1월에 발간한 경제에너지부의 경제전망보고서 전망치임
 자료: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9*, 2019.4.17

- (안정화위원회) 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에서는 독일의 재정현황 및 주정부 재정건전화에 대해 논의²³⁾
 - (재정) 위원회는 외부환경의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과 수입 및 지출 측면에서의 재정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독일의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가 상한선인 GDP 대비 0.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주정부 재정건전화 계획) 위원회는 브레멘, 자알란트에 대해 '18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²⁴⁾를 충족하였지만,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재건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²⁵⁾
 - 위원회는 베를린, 브레멘, 자알란트,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작센 안할트 등 5개주가 합의된 통합 요건을 준수했다고 평가했으며, '19년까지 통합지원을 할 계획
- (지역개발) 연방정부는 석탄 채굴지역 구조적 변화를 위해 2038년까지 최대 400억유로를 제공할 계획이며 연방정부는 지방정부 및 지자체에 기본법 제104b에

23) 독일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9. 06. 1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9/06/2019-06-18-PM-stabilitaetsrat.html>

24) 채무제한법 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GDP 대비 0.35% 이하 달성)

25) 안정화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연방·주정부에 대해 건전화계획을 수립. 4개주(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자알란트, 브레멘)에 대한 건전화계획이 2016년까지 수립하였음. 이후 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브레멘, 자알란트 등 2개 주에 대한 건전화계획을 재수립

따라 최대 140억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 2019년 8월 28일 연방내각에서 통과된 탄광지역의 구조적 개발법은 성장·구조 변화·고용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구조정책 권고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원원칙 및 재정범위를 구체화 함
- 탄광지역 개발을 위해 도로 및 철도노선 확장과 규제 샌드박스, 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약 260억유로 규모 배정함
- 석탄채굴지역 구조개발법은 열악한 석탄채굴지역과 특히 헬름스테트 지역을 중심으로 10.9억유로 구조지원을 계획함
-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세 곳의 석탄채굴지역의 구조변경사업을 2019년까지 시행될 수 있는 비상프로그램 채택에 합의함
 - 자금조달은 주정부의 신청을 기반으로 석탄채굴지역에 추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연방정부는 2.4억유로의 추가자금을 제공할 계획

라. 기후변화

- 독일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목표로 기후보호 2030 프로그램(Klimaschutzprogramm 2030) 발표²⁶⁾²⁷⁾
 - (목표)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²⁸⁾을 달성할 것이라 설명하였고 2030년까지 최소 65%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²⁹⁾

26) 연방재무부, Themen, Schlaglichter, Klimaschutz(2019.9.1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Klimaschutz/2019-09-20-Klimaschutzprogramm-kurzfassung.html>

Financial Times, Germany unveils sweeping measures to fight climate change(2019.9.20.)

<https://www.ft.com/content/26e8d1e0-dbb3-11e9-8f9b-77216e1f17>

27) 독일정부는 당초 2020년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약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하여 동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함

28) 탄소중립: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함(에너지공단, 2015)

29) 2019년 5월 14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기조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연방정부의 기후정책 강화를 예고한 바 있음

- (주요정책) 2023년까지 약 540억유로의 기후 패키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21년~'25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매년 이산화탄소 적정 가격을 인상하는 등 운송 및 건축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가격인상 계획
 - (이산화탄소 가격) 2021년부터 1ton당 10유로를 책정한 후 2025년 3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가격 결정
 - (교통부가가치세) 철도 부가가치세를 기존 19%에서 7%로 하향 조정하지만 항공세는 인상할 계획
 - (친환경차 지원)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 보급을 7백만~천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구매 프리미엄 확대 및 법인 차량 과세 인하 등에 합의
 - (전기차 인프라) 2030년까지 전기차충전소 백만기를 독일 전역에 설치할 계획
 - (분담금 인하)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분담금을 인하하여 장거리 통근자 수당 인상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
- 올라프 솔츠 독일 재무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한 추가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으로 진행할 계획